

## 요약

### 제1장 서론

이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 연구범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2차 연도에 걸친 연구로 이번 연구는 자원개발 연계 해외건설·플랜트 진출 모형의 구축 및 적용과 정부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1차년도(2009년)에는 1단계로 국가별 자원매장량과 생산량, 국가위험도 및 자원의존도, 건설·플랜트 시장 잠재력 분석을 통해 자원연계 진출 잠재력이 있는 국가를 선정하고 2단계로 자원개발 단계별 연계 진출과 진출국가의 자원시장 및 정책 특성을 반영한 연계진출 유형을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자원 연계진출 모형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2차년도(2010년) 연구에서는 1차 연구에 이어 자원개발 연계진출 모형의 구축 및 적용을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경제성 분석의 기본모형으로 설정하여, 위험요소별 경제성 효과를 분석하고, 국내외 자원 연계 진출 지원체계 및 제도의 실태 분석과 연계진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수행단계별 세부내용 및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 연구수행단계별 세부내용 및 연구방법 〉

제 1 장	목 차	주요 내용	연구방법
제 1 장	서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의 배경 및 목적</li> <li>- 연구의 범위와 방법</li> <li>-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조사</li> <li>- 자문회의</li> </ul>
제 2 장	자원개발 연계진출 모형의 구축 및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개발 연계진출 모형 구축</li> <li>- 자원개발 연계진출 모형의 적용 : 경제성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조사</li> <li>- 자문회의</li> <li>- 계량 분석</li> </ul>
제 3 장	국내의 해외자원개발 및 해외건설·플랜트 지원제도의 실태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법률 및 조직</li> <li>- 사업 단계별 지원 제도·기반조성 / 사업발굴 / 자원조달 단계·지원 제도 / 기관 / 운용현황</li> <li>- 지원제도 분석 및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조사</li> <li>- 자료분석</li> <li>- 자문회의</li> </ul>
제 4 장	주요국의 해외자원개발 및 해외건설·플랜트 지원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중국·일본의 해외자원개발 및 해외건설 지원제도 및 체계·자원 외교, 지원제도 및 기관·해외원조, 진출사례 등</li> <li>- 정책적 시사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조사</li> <li>- 자료 분석</li> <li>- 협동연구</li> </ul>
제 5 장	해외자원개발 연계진출 지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개발 연계진출 전략에 따른 지원방향</li> <li>- 자원연계 진출 사업추진 단계별 지원 방안</li> <li>- 자원개발 연계진출 역량의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조사</li> <li>- 설문·면담 조사</li> <li>- 자문회의</li> </ul>
제 6 장	결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li> <li>- 연구의 특징과 한계</li> <li>- 향후 연구과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조사</li> <li>- 자문회의</li> </ul>

끝으로 자원개발 연계 혹은 동반진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동반진출분야를 모색하는 연구 및 실무차원의 논의가 있어 왔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2차 연도에 걸쳐, 보다 체계적으로 자원연

계진출 모형에 근거하여 연계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통해 정부의 지원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자원연계 진출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정책 및 정책지원 제도 분석을 통해, 자원연계진출 지원 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 제2장 자원개발 연계진출 모형의 구축 및 적용

2004년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처음 등장한 ‘패키지형 자원개발 모델’은 “자원보유국이 필요로 하는 경제발전 경험, 에너지 인프라 및 SOC 건설을 지원하고,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연계형 모델”로 정의되고 있다. 2007년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07~2016년)에서는 ‘패키지형 자원개발’의 적극적인 추진계획이 제시되었고, 연계 산업 범위도 에너지 관련 산업 위주에서 조선, 건설·플랜트, 문화, 통신 산업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패키지형 자원개발모형에 따라 ‘제1차 해외건설진흥계획’(2005~2009년)에서는 자원연계 패키지 방식이 해외건설 진출전략의 하나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패키지 방식의 접근전략은 자원보유국으로 하여금 자원개발 시 무조건적으로 SOC 등의 사업이 패키지로 수행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주게 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자원개발 동반진출, 동반성장의 추구하고 같은 보다 발전된 접근 전략이 모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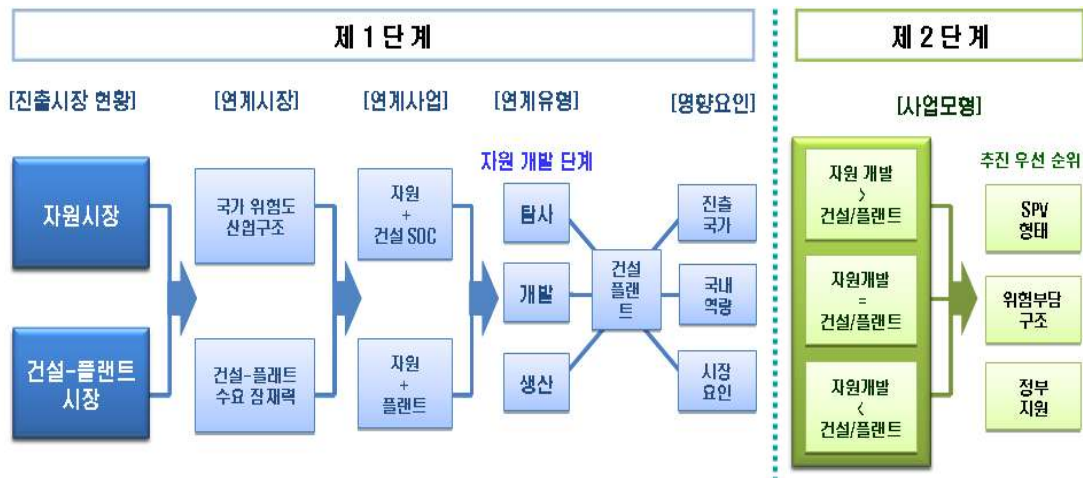
자원연계 진출 모형 구축 단계는 크게 6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연계 진출 시장의 유형화’ 단계로, 시장의 잠재력, 자원개발정책, 자원시장의 경쟁강도 등의 범주에 따라 시장을 유형화한다. 시장잠재력 평가에는 자원매장량, 건설 및 플랜트의 수요잠재력 등이 함께 고려된다. 두 번째 단계는 ‘연계시장 여건 분석과 진출가능성의 분석’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진출국가의 국가위험도 및 산업구조 (자원수출의존도, 총부가가치중 1차 및 광업 부문의 비중) 등을 검토하여, 자원개발 연계가능성 여부를 판단한다. 세 번째 단계는 ‘자원 연계 진출 분야 및 대상의 설정’ 단계로, 앞의 두 단계를 통해 선정된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연계 진출 분야와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한 조사를 추진한다. 자원보유국

의 향후 인프라 및 플랜트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우리가 경쟁우위에 있는 분야를 자원개발과 연계한다.

네 번째 단계는 ‘자원개발 과정에 따른 연계 진출의 가능성 타진’ 단계로 선정된 건설 또는 플랜트 사업과 연계할 자원개발 단계 (탐사, 개발, 생산)를 선정한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자원개발 과정별 연계 사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한다. 이 때 자원개발사업과 연계사업의 비중, 연계 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 (SPV)의 설립 여부, 자원개발사업과 연계사업의 착수 시기, 자원의 탐사 (또는 개발) 시 검토비용의 지원 여부, 정부의 재정지원 여부 등이 고려된다.

연계진출의 모형의 유형화는 자원개발단계 즉 탐사, 개발, 생산에 따른 3가지 연계 유형으로 나타나며, 이 연구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는 연계모형은 탐사단계의 자원개발사업과 건설·플랜트의 연계모형이다.

〈 자원개발 연계 진출모형 〉



이 연구에서의 기본 모형은 탐사단계에서 인프라 연계가 이루어지며, 통합 SPC를 구성하고, 인프라 사업은 자원사업과 연관성 있는 것으로 하고, 매장량 확인 이전에 건설 프로젝트가 착수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매장량이 확인되면 개발 단계로 넘어가게 되므로 매장량 확인 이전에 건설사업을 착수하게 된다는 의미는 탐사단계에서 연계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진다. 실질적으로는 매장량

확인 이전에 건설사업이 시작되기만 하면 건설사들이 부담하게 되는 위험의 본질은 변하지 않게 된다.

자원탐사와 인프라사업 연계모형의 적용을 위해, 광물자원 연계 사례와 석유자원연계 사례를 각각 시범사례로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광물자원 연계 사례로는 최초로 연계가 이루어진 사업이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연계 사업 사례’를 기본 현금흐름으로 사용하였으며, 석유탐사와 인프라 연계사업 사례로는 ‘Canada-Nova Scotia Offshore Petroleum Board’에서 제시한 전형적인 석유탐사사업 사례를 기본 현금흐름으로 하였다.

이 두 가지 사례를 토대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고 국가위험요인 및 조세의 정책 효과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수익성지표와 위험성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판정하고 이러한 지표의 수준에 따른 수익률의 변동을 파악하여 정책효과를 측정하였다. 수익률 지표로는 NPV와 IRR을 주로 고려하였다. 시뮬레이션 시에는 수익률의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 NPV의 평균을 이용하였고, 수익률의 위험을 반영하는 지표로는 NPV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 □ 광물자원 탐사 + 인프라 연계사업의 경제성 분석

자원연계형 인프라플랜트 사업의 대표성, 분석 자료의 구득 가능성, 1차년도 연구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 개발 연계 사업을 분석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기본 경제성 분석은 사업 추진단계별 위험의 크기는 투입되는 비용과 비례하는 형태를 취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수행되었으며, NPV 3천 8백만달러, IRR 10%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기본 경제성 분석 결과를 기초로 ‘국가위험’과 ‘법인세’ 등 두 가지의 위험요소를 반영하여 수익률과 수익률의 변동성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마다가스카르의 국가위험 프리미엄 8.16%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2%p의 IRR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세 부과에 따른 부담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인세율을 이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IRR이 2%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국가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 등 상품에 가입할 경우 수익률 자체가 현저히 하락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국가별 위험도는 그 자체가 국가와 시점에 따라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진출 국가를 선정함에 있어 국가위험 프리미엄의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진입하고자 할 경우 본격적으로 수입이 발생하여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였을 때를 대비한 출구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부차원에서는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중과세 방지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다.

#### □ 석유탐사 + 인프라 연계사업의 경제성 분석

석유탐사 + 인프라 연계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는 캐나다의 ‘Canada-Nova Scotia Offshore Petroleum Board’가 제시한 전형적인 석유탐사 사업 사례를 기본현금흐름으로 하였다. ‘Canada-Nova Scotia Offshore Petroleum Board’에서 제시한 석유개발 경제성 분석은 석유개발 사업의 특성들을 반영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유가의 상승과 탐사 투자 유인 증가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유가가 1% 상승할 때 탐사 투자는 1% 이상 증가하여 양자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것을 반영하여 탐사비용과 유가와 상관관계가 유효한 것으로 가정하고, 기타 외생변수들의 변동성에 대한 가정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인프라투자와 연계되기 이전의 순수한 석유 사업의 경제성은 NPV의 평균이 16억 달러, NPV의 표준편차는 5.8억 달러라는 결과를 얻었다.

석유사업과 인프라사업이 연계될 경우 수익률의 평균은 10억 달러로 하락하였으나 표준편차는 인프라 사업이 연계되기 이전과 동일한 5.8억 달러로 나타났다. 건설(인프라) 투자가 사업초기에 단기간에 끝나기 때문에 사업 수익율의 절대규모(평균)에는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만, 건설비용의 변동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프라 사업이 석유사업과 연계될 경우에는 서명보너스를 감면받는 조건으로 연계되는 경우와 서명보너스와 상관없이 연계되는 경우로 구분된다. 연계되는 인프라 사업이 서명보너스를 대신하지 않을 경우, 연계로 인해 수익률의 평균은 하락하나 수익률의 변동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석유 탐사투자의 규모가 탐사 성공확률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인프라 사업이 서명보너스를 대신하지 않는 한 수익률의 변동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인프라 사업이 서명보너스를 대신하는 형태로 연계가 이루어질 경우, 인프라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탐사성공확률이 높아져서 수익률의 평균은 미미하게 증가하는 반면에 수익률의 변동성은 현저히 증가하게 된다.

이 결과의 시사점으로는 내용적 연관성이 높은 사업간의 연계를 통해 사업의 위험을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석유탐사사업과 인프라 사업간의 연계 모형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인프라 사업이 서명보너스를 대신하지 않는 형태로 연계되는 것이 사업의 위험관리에는 적합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자원사업과 내용적인 연관성이 없는 사업을 연계시키고자 할 경우 석유사업과 인프라사업의 연계 방식은 서명보너스를 대신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자원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는 서명보너스의 개념보다는 선투자를 통한 담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계 사업을 발굴하되 자원사업과 내용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탐사단계에 연계시키는 전략의 추진이 중요하다.

### 제3장 국내외 해외 자원개발 및 건설·플랜트 지원제도의 실태와 평가

이 장에서는 국내외 해외자원개발 및 해외건설·플랜트 지원제도를 자원개발 연계진출지원의 관점에서 진출 기반조성 단계, 사업발굴 단계, 재원조달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먼저 진출기반 조성 측면에서 에너지산업해외진출협의회, 자원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등을 통한 해외자원개발과 연계사업, ODA 등 원조지

원체제의 효과성 제고를 통한 진출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산업해외 진출협의회는 자원개발과 인프라 부문의 연계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설립되었으며, 정보공유, 동반진출 전략수립에서부터 공동조사 시행, 업계간 이해조정 및 컨소시엄 구성에 이르기까지 연계진출의 전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협의회로 자원개발 공기업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과 민간기업, 관련 지원 기관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 에너지 인프라 부문 (한전, 플랜트협회 등) 이 참여하고 있지만, SOC 인프라 부문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어, 보다 포괄적인 자원 연계사업의 추진협의회로서의 역할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분권화된 원조체계를 조정하고 정부부처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향후 자원 연계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역할이 적극 요구된다.

자원 연계 사업 발굴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크게 정보제공 및 컨설팅 사업과 타당성조사비 지원사업 등이 있다. 정보제공 및 컨설팅 사업은 주로 관련 협회 (해외자원개발협회, 해외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등)를 통해 분절적으로 수행되어 연계사업을 위한 통합정보제공 및 컨설팅 기능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해외시장분석을 통해 유망한 연계 시장과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연계 사업의 타당성조사 지원도 자원공기업 및 관련협회가 각각 수행하고 있지만, 연계사업의 발굴과 더불어, 통합적 타당성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무역개발청 (USTDA)과 같은 타당성조사 전담기관의 설치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타당성조사 전담기관을 설치할 경우, 조사역량강화, 소요비용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연계사업의 재원조달 지원에 있어서 MDB(국제개발은행)의 공적 신용자금의 활용도가 낮고, 공적개발원조 (ODA)의 규모도 적어, 실질적인 재원조달의 기능은 미약한 실정이다. 아울러, 지식경제부의 자원개발펀드 및 국토해양부의 글로벌 인프라펀드가 각각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지만, 자원 연계 사업에 펀드를 공



동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이외 금융 등 지원제도 즉 출자, 용자, 보증, 보험 관련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자원연계에 우선순위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제4장 주요국의 해외 자원개발 및 해외 건설·플랜트 지원체계

이 장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주요국이 해외자원개발 및 해외건설·플랜트 지원체계를 외교적 지원, 자원 및 건설, 플랜트 지원 정책 및 조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특히 자원개발 연계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ODA체제에 초점을 두고 파악하였다.

미국은 민간 기업 중심의 자원개발이 주류를 형성하고,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세금 및 재정지원 등 간접지원방식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세금우대, 로열티와 유정사용료의 감면, R&D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법규상의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자원개발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주정부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6~7% 수준의 낮은 세율(미국의 일반기업은 35%의 법인세율을 적용)이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미국 기업의 해외수입에 대한 이중과세방지제도 (FTC)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ODA 등 대외원조규모의 확대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지원과 경제개발지원 등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지원과 연계한 자원 확보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국가주도의 공기업을 기반으로 자원개발 연계 인프라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및 대규모 펀드의 조성 및 진출지역에 대한 유무상 원조 등 총체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국수출입은행은 중국건설은행, 중국인민은행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중국기업의 대 아프리카 투자 지원 등 해외자원 개발 투자금융지원과 중국의 ODA 프로그램에 따른 저금리 융자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 국가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자원개발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원연계 진출에 있어서 앙골라방식은 대표적인 진출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은 「신국가에너지전략」을 수립하여 최근 자원보유국과의 자원외교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으며, 가치의 외교를 강조하고 안정적 에너지 및 자원 확보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페르시아만협력이사회 국가와의 FTA 교섭 추진과 러시아, 베트남 등에 대한 자원경제외교를 강화하고 이들 지역에 ODA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대외원조를 개발도상국들에 제공하고 있으며, 신 ODA체제의 구축과 해외건설 및 인프라 지원을 위한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 등 적극적인 자원연계 진출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제5장 해외자원개발 연계 진출 지원 방안

이 장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연계진출 지원 방안을 자원개발연계 진출 전략에 따른 지원방향과 연계진출 단계별 지원방안, 자원개발연계진출 역량의 강화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자원개발 연계 진출 전략으로 권역별 거점 국가의 선택과 집중 전략,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 경제협력 차원의 접근, 중장기적 접근을 통한 자원개발 연계 진출, 국제개발은행의 적극적 활용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자원개발 연계진출 지원방향은 연계진출 사업 단계별 지원방안과 연계진출 역량 강화 방안으로 설정하고, ‘연계진출’에 지원의 우선순위를 둔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자원연계 사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연계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한 이유로는 ‘연계사업에 중점을 둔 기획·관리 등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들었다. 연계진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부국에 대한 ODA의 확대 및 연계’의 중요성과 ‘연계사업의 추진조직 구성과 재원 조달’ 단계가 연계사업의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자원연계진출 지원방향에 따른 연계진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연계진출 사업단계별 지원 방안을 자원개발 연계진출 기반조성 단계, 해외 자원개발 연계 사업의 발굴 단계, 자원 연계 사업 타당성 조사 단계, 자원 연계

프로젝트 금융구조 및 재원조달 단계 등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단계인 자원개발 연계진출 기반조성 단계의 지원방안으로는 자원 및 인프라 협력 등을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 추진, 진출국과의 FTA 추진 및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 진출잠재국과의 ODA 등 유무상 지원 등 국제개발협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제2단계인 해외자원개발 연계 사업의 발굴 단계에서는 중장기적 체계적·전략적 접근을 견지하면서, 해외자원연계 사업의 발굴을 위한 「자원개발 연계 해외진출 협의회」 구성 등을 제안하였다. 제3단계인 자원 연계 사업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자원개발 연계 사업에 대한 “통합적 타당성 조사 지원” 체계를 수립하고, 자원개발 연계 사업의 타당성 조사지원 기반의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단계인 자원 연계 프로젝트 금융구조 및 재원조달 단계에서는 자원개발 연계 사업의 정치적 위험에 대응한 금융 구조의 설정 방안과 연계사업 프로젝트 조직 방식(SPC)에 따른 사업추진 지원 방안, 투자재원 조달, 금융 및 조세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자원개발 연계 진출 역량 강화 방안으로 범부처 차원의 연계 진출 지원 체계의 마련, 민간부문의 자원-인프라 연계 선진기업의 육성, 자원개발 연계 진출을 위한 금융 및 투자지원 기반의 강화, 연계진출 단계별 정부 및 민간의 역할 분담 모형의 구축, 자원개발 연계 진출을 위한 통합적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전문인력양성 등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 제6장 결론

이 장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기대효과를 정리하는 한편, 이 연구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본 뒤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번 연구의 의의는 자료 확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계진출 사례(마다가스카르 니켈광 사업)를 기본 경제성 모형으로 설정하여 현금흐름 분석 등을 통해 내부수익율을 파악하고, 진출국가의 정치적 위험 및 조세부과 등이 경제성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 연계사업의 경제성 변화효과와 시사점을 도출한데서 찾

을 수 있다. 또한 전형적인 석유사업의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탐사단계에서 연계 방식에 따른 사업의 수익성 및 위험성을 분석하여 위험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연계 진출 방식을 제시한 데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자원개발 연계진출전략 차원에서 논의를 집중한 반면에 이 연구는 자원개발 연계진출을 위한 국내 지원체제(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을 해외 자원개발 및 해외건설, 플랜트 분야의 지원체제 및 제도를 포괄하는 ‘자원개발 연계 진출지원’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더불어 주요 외국의 해외 자원개발 및 건설·플랜트 지원 체제 조사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해외자원개발 연계진출의 경제성 모형에 적용된 사례의 구체적인 정보 획득의 어려움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추정치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자원연계 진출 지원방안의 구체적 실행전략이 제시되기 보다는 지원방안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향후에는 지역별 거점 국가를 선정하여 연계시장진출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맞춤형의 지원전략과 세부지원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경제성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보다 충분한 사례를 통해, 지역별 국가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여 사업추진단계별 위험관리 모형과 세부 전략을 모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